전경선 위원장, '전남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교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전남 발전 도약 위해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민주당/목포5)이 시군 '지역 환경교육센터'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전남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도민,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생태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조례에 반영했다.

특히,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민간주도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전경선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역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우승희 도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

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재정지원 축소해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민주당/영암1)은 학생수 감소로 학교의 존폐 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청 재정의존도가 높은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인사채용 등 사학비리 발생과 법정부담금 미납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비율 이하의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비리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강화 등 예산편성을 통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재정력 등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공영형 전환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리발생 사립법인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한편, 2019년도에 사립학교에 지원 편성될 예산은 3,719억원(인건비 2,590억원 포함)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3억원이 증가했다.

나광국 도의원, 전남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발의

시 · 군 1개 사업 원칙 지원…사업비 30% 이내 지원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민주당/무안2)은 22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각 시 · 군마다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주차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번 조례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시장 · 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은 연간 1개 시 · 군에 대해 1개 사업 지원이 원칙이며,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광국 의원은 "전라남도 시 · 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에서 보조하여 시 · 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으로 관광객 및 시민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남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김한종 도의원,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발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원(민주당/장성2)이 전남 노인일자리 창출과 독거노인 고독사 지킴이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전남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소득창출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협의회 성격의 위원회를 '전남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운영위원회'로 변경해 주요 정책 등을 결정하고 심의토록 기능을 강화했다.

전남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 고독사지킴이단' 운영과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해 자원봉사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으로 도내 근로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 근로기회가 더 많이 확대되길 바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고독사 지킴이단 활동에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나광국 도의원, 전남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 전국 최하위

전남 21.9%…무안 · 목포 등 11개소 내진성능 미확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민주당/무안2)이 지난 14일 열린 2018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지역 학교 건물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의원은 감사에서 "전남도내 학교 건물, 관공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전남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남도 내 학교 건물 내진설계율은 전국평균 28.1%에 미달하는 21.9%로 제주, 전북, 경북에 이어 4번째로 낮았으며,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은 총 1,762개소 중 296개소로 내진설계율이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도내 24개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무안 · 목포 등 총 11개소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조옥현 도의원, 중소 조선업 활로 마련 강력 촉구

중소 조선업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정책 집중 지적 대책 요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민주당/목포2)은 지난 12일 전남도 경제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업 일부 사업의 부진한 추진실적과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의 지속적인 관리 미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조선업 악화로 인해 영암과 목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올해 들어 선박 발주량이 늘면서 조선경기가 한층 나아진 듯 보였으나 일부 대기업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에서 조선업 관련 사업 중 스마트 친환경 선박 육성기업을 포함한 10여개의 사업의 실행율이 0%인 이유를 묻고 사업 진행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들이 RG(선수금 환급 보증)를 꺼리는 실상이 중소 조선업 활로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정부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남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과 소비가 최하위를 기록한다"며, "많은 준비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직종들의 경쟁률이 몰리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창업 실패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김길용 도의원, 장애인콜택시 불합리 운영 개선 촉구

시 · 군별 이용요금 최대 3배 차이…교통복지 큰 차별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민주당/광양3)이 지난 13일 전남복지재단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이용대상자, 운영시간대 등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장애인 교통복지에 큰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역이동지역센터가 광역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 · 군별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이 기본요금은 2km 기준으로 700원에서 1,200원까지, 미터당 요금은 146m 기준으로 30원에서 100원까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김길용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를 매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요금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같은 전남도민 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요금이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차별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장애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답이 먼 곳에 있지 않다. 전남도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 없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문행주 도의원, '청소년 심리적외상치유 지원 조례' 발의

청소년 · 사람 · 학교 · 가정폭력 등 외상 후 장애 예방 · 치료 마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행주 의원(민주당/화순1)이 전라남도 청소년들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라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2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고 교육감은 도지사 지원계획에 협조해 매년 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문행주 의원은 "2017년 전남도내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5.2%, 우울감 경험률은 23.5%로 전국대비 낮은 수준이나 청소년 심리상담 ·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전라남도 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민행 대표기자

최현주 도의원, 전남 학생 사이버폭력 2배 증가 지적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는 책임방기…학폭위 전문가 배치 요구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로 떠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 다변화와 학폭위에 전문가 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의 교육부 학교폭력 정보공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 학교폭력 심의가 2015년 1059건에서 2016년 1209건, 2017년에는 1447건으로 해마다 15%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학생 수 증가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15년 1555명, 2016년 1685명에서 2017년에는 222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급증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심의 유형 중 폭행과 협박의 증가도 우려되지만 사이버폭력은 2017년 52건에서 올해 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폭행으로 학폭위에 심의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등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현주 의원은 "특히 사이버폭력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학생은 24시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교육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강정희 도의원, 전남 장애인 고용율 '0' 15기관

11개 공공기관 평균 장애인고용률 0.77%…의무고용률 위반

강정희 의원(민주당/여수6)이 지난 12일 발표한 따르면, 전남 산하 출자 ·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11곳이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는 11개 공공기관에 올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0.77%로 작년 1.3%보다 하락해 장애인 고용환경이 더욱 나빠졌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기관별로는 전남개발공사 2.40%, 순천의료원 2.09%, 강진의료원 2.13, 생물산업진흥원 2.63%, 전남테크노파크 1.88%였고, 광주전남연구원 · 녹색에너지연구원 · 신용보증재단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문화관광재단 · 남도장학회 7곳은 장애인 고용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이민행 대표기자